

12. 대구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 2018년 4월 6일
- 제출자 : 대구광역시장(건설교통국장)
- 회부일자 : 2018년 4월 10일
- 상정일자
 - 대구광역시의회 제257회 임시회
 -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2018년 4월 19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김종근 건설교통국장)

□ 제안이유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 및 조례위임사항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시민의 자전거 운행 안전도모와 자전거 사고 예방을 위한 자전거 운전자 준수사항을 구체화된 내용으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자전거 이용시설 정의' 수정(안 제2조제1호) 및 '자전거주차장의 설치 기준' 조례위임사항 정비(안 제10조제1항)
- 자전거 운전자의 안전 도모 및 자전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자전거 운전자 준수사항 신설(안 제4조제3항, 제4조제4항 신설)
- 용어 개정에 따른 조문정비 등 현행 조례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함(안 제4조제1항 및 제2항, 제5조의 제목 및 제1항부터 제3항, 제6조제2항, 제9조의 제목 및 내용, 제10조 각항, 제11조제2항, 제12조 개정)

□ 참고자료

-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1 참조
- 나. 관계법령 : 붙임2 참조
- 다.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18. 2. 28. ~ 3. 21(20일간)
-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사항 없음

4)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5)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불입3 참조

3. 검토보고 요지(보고자 : 전문위원 전배운)

- 본 개정 조례안은 자전거의 안전한 운행환경 조성을 위해 자전거 운전자의 준수사항을 보다 세부적으로 구체화하고, 자전거 주차장 조성 기준을 합리화 하는 동시에 상위법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고 한다.)」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임.
- 먼저, **안 제4조제3항 및 안 제4조제4항**에서는 자전거 운전자의 안전 도모 및 자전거 사고 예방을 위해 자전거 운전자 준수사항을 신설하였는데,
- 대구시의 자전거 교통사고 발생률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2016년 사고발생 건수 기준 1,294건임. 이는 부산, 인천, 대전에 비해 두 배가 넘고, 울산과 비교하면 3배가 넘는 수치를 볼 때, 본 개정조례안에 자전거 안전장비 착용과 안전운행 등을 위한 자전거 운전자의 준수사항을 구체화하여 명시한 것은 타당한 조치임.

▶ 자전거 교통사고 타시도 비교 (2016년)

구 분	전국	대구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발생건수(건)	14,937	1,294	3,503	567	504	366	538	305
자전거보유대수(천대)	10,228	499	2,229	421	488	208	332	203
1대당 사고비율(%)	0.15	0.26	0.16	0.14	0.10	0.18	0.16	0.15
인구1만명당 사고건수	2.9	5.3	3.6	1.6	1.7	2.4	3.5	2.6

- **안 제10조**는 제2항 및 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항, 제2항, 제3항을“법”제11조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 설치, 학교 등에 자전거 주차장 설치 권장, 자전거 설치비용 지원 등의 내용을 신설하였는데,
- 이는 현행 조례에서 상위법에 명시된 동일 조문내용을 삭제하여 중복성을 없애고,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된“노상·노외·부설주차장 등 시설물의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을 준용하려 하는 것으로 법리상 문제점은 없음.
- 그 외 **안 제2조, 안 제4조제1항 및 제2항, 안 제5조, 안 제9조, 제10조 각항** 등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용어와 조문을 정비한 것으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됨.
- 한편, 대구시의 자전거 교통사고 발생유형을 보면 자전거와 차량 간 사고가 전체 사고의 9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차량과 자전거의 교차점이 많은 격자형 도로 구조에 따른 것임.
- 따라서, 자전거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안전한 자전거 도로망 구축 및 안전시설물 보강, 자전거 안전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등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붙임1 참조)

붙임1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자전거 이용 시설”이라 함은 자전거도로, 자전거주차장, 기타 자전거(원동기를 장치한 것 및 장애인용 의자차를 제외한다)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p> <p>제4조(시민의 권리와 책무)</p> <p>① 모든 시민은 안전하고 쾌적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와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에 관한 각종 정책에 대한 알권리를 가진다.</p> <p>② 모든 시민들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를 진다.</p> <p>〈신설〉</p> <p>〈신설〉</p> <p>제5조(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 수립) ① 시장은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u>자전거 이용 시설 정비계획</u>(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5년마다 <u>재정비계획</u>을 수립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1.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의 기본방향</p> <p>2. 연도별 정비계획</p> <p>3.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p> <p>4. 정비사업계획의 수립시행</p> <p>5. 자전거 도로망 등 자전거 이용시설 상호간의 연계성</p> <p>6. 철도역·도시철도역·버스터미널 등 대중교통시설과의 연계성</p>	<p>제2조(정의) ----- -----.</p> <p>1. “자전거 이용 시설”이란 자전거도로, 자전거주차장, <u>전기자전거 충전소와 그 밖에 자전거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u></p> <p>제4조(시민의 권리와 책무)</p> <p>① <u>시민은</u>----- -----.</p> <p>② <u>시민은</u> ----- -----.</p> <p>③ <u>자동차운전자는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에 따라 자전거운전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하며, 그 옆을 지날 때는 안전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u></p> <p>④ <u>자전거운전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모 등 안전장비를 착용 하도록 하고, 야간에 도로를 통행할 때에는 전조등과 후미등을 켜거나 야광띠 등 불빛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u></p> <p>제5조(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u>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u>(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u>활성화계획</u>에는 법 제5조제3항 및 영 제4조의 사항과 그 밖에 자전거 이용여건 개선에 필요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p>

현행	개정안
<p>7. 통학로·통근로 등 주요 교통로 등에 대한 자전거 도로 노선계획</p> <p>8. 사업비 조달계획</p> <p>9. 기타 자전거 이용여건 개선에 필요한 사항</p>	
<p>③시장은 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을 할 경우에는 시민들에게 공고를 하여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p> <p>제6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p> <p>① (생략)</p> <p>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자문에 응한다.</p> <p>1. 정비계획의 수립·변경 및 기본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p> <p>2.~5. (생략)</p> <p>제9조(도시계획 등의 반영)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5조제2항의 정비계획의 내용이 우선적으로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구단위계획</p> <p>2.~3. (생략)</p> <p>제10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①시장은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노외주차장과 단지조성사업 등으로 설치되는 노외주차장 및 공공기관과 이에 준하는 시설에 대하여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면적은 노외주차장 총면적의 100분의 5이상으로 한다. 다만, 영에 의한 자전거 주차장 설치 제외지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시장은 시내버스 정류장, 도시철도역 등 연계교통 환승지점에 자전거 주차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p> <p>③시장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자 또는 관할구역 안에 있는 학교에 대하여 자전거 주차장 설치를 권장하여야 한다.</p> <p>④시장은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주택단지, 대형유통시설 등의 사업주체와 건물주에 대하여 자</p>	<p>③ 시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시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p> <p>제6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 -----.</p> <p>1. 활성화계획의 ----- -----</p> <p>2.~5. (현행과 같음)</p> <p>제9조(도시·군계획 등의 반영)---- ----- ----- 활성화계획의 ----- -----.</p> <p>1.----- ----- 따른 도시·군계획</p> <p>2.~3. (현행과 같음)</p> <p>제10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자전거주차장 설치장소 외에 공원, 하천, 도시철도역, 시내버스정류장 등 자전거 이용이 많은 장소에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p> <p>〈삭제〉</p> <p>② 시장은 학교 등에 대하여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p> <p>〈삭제〉</p>

현행	개정안
<p><u>전거 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하여야 한다.</u></p> <p>⑤시장은 <u>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u>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제11조(자전거주차장의 운영)</p> <p>①(생략)</p> <p>②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자전거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p> <p>③(생략)</p> <p>제12조(자전거주차장의 요금)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 주차장의 요금은 무료로 한다.</p>	<p>③ 시장은 <u>제2항에 따라</u>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전거주차장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제11조(자전거주차장의 운영)</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제10조제1항의----- ----- ----- -----.</p> <p>③ (현행과 같음)</p> <p>제12조(자전거주차장의 요금) 제10조제1항의----- -----.</p>

(붙임2 참조)

붙임2

관계법령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7.26.>

1. "자전거"란 사람의 힘으로 페달이나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驅動裝置)와 조향장치(操向裝置) 및 제동장치(制動裝置)가 있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로써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한다.
- 1의2. "전기자전거"란 자전거로서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동기를 장착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 가. 페달(손페달을 포함한다)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아니할 것
 - 나.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것
 - 다. 부착된 장치의 무게를 포함한 자전거의 전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일 것
2.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 자전거 주차장, 전기자전거 충전소와 그 밖에 자전거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란 자전거이용시설의 개설·확장 및 포장(鋪裝)과 유지·관리를 말한다.
4. "도로관리청"이란 「도로법」에 따른 도로 관리청과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라 농어촌도로의 정비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제7조에 따른 자전거도로의 노선을 지정·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시행일 : 2018.3.22.] 제2조

제5조(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경찰청장·경찰서장 또는 지방국토관리청장 등의 의견을 들어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활성화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로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도로 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인 국도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③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활성화계획 중 도시·군계획과 관련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의 기본방향
 2. 연도별 활성화계획
 3.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④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때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자전거도로와 연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가 읍·면 지역의 국도·지방도에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도로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한 활성화계획이 시·도지사가 수립한 활성화계획에 부합하지 아니하면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운영)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주차장법」 제7조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도로 또는 그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② 「주차장법」 제12조 및 제12조의3에 따라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 및 「주택법」 제35조에 따른 주택건설기준등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자전거이용시설의 정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자전거횡단도·자전거신호기 및 자전거교통안전표지(자전거의 교통안전에 필요한 주의·규제·지시·안내 등을 표시하는 표지판 및 도로의 바닥에 표시하는 기호나 문자 또는 선 등의 노면표지를 말한다)
2.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방호울타리·방호경계턱 등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시설
3. 자전거의 주차 및 잠금장치를 위한 시설물(이하 “자전거주차장치”라 한다)
4. 자전거 이용자의 휴식소 또는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야영장 등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시설

제4조(활성화계획의 반영) 법 제5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하 “이용활성화사업”이라 한다) 추진의 우선순위 분석
2. 자전거도로망 등 자전거이용시설 상호간의 연계성
3. 철도역·도시철도역·버스터미널 등 대중교통시설과의 연계성
4. 통학로·통근로 등 주요 교통로 등에 대한 자전거도로 노선계획
5. 연도별 이용활성화사업의 추진계획 및 사업비 조달계획
6. 이용활성화사업의 시행방법
7. 도로의 신설·확장·재정비계획과 택지개발 또는 공업단지 및 관광단지 등의 조성사업과의 연계방안
8. 이용활성화사업의 효과 분석
9. 자전거 교통안전교육 실시 방안

제7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① 법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별표 1의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 ② 삭제 <2017.12.29.>

- ③ 자전거 주차장에는 자전거주차장치를 설치하여 자전거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붙임3 참조)

붙임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대구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대구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본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문 정비 및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발생이 없으므로 미첨부 1호 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 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서 덕 찬

4. 질의 및 답변 요지

질 의	답 변
○ 자전거 안전운행을 위해 안전모에 대한 세분화된 기준이 필요하며, 노후화된 안전교육장 시설보강 및 신천동로안전시설 확충이 필요함.	○ 안전모에 대한 처벌 규정은 현재 정부에서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안전모 착용이 잘 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자전거 사고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안전시설 설치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미흡한 자전거 인프라와 안전시설을 늘리는데 만전을 기하고, 자전거와 차량이 만나는 교차점에서 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	○ 자전거와 관련한 용역이 현재 진행중에 있으며 용역결과에 따라 최선의 방법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음주후 자전거를 타서 사고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 금년 9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 음주 후 자전거를 타는 행위도 음주운전에 해당되어 처벌이 가능하므로 법 개정사항 등을 시민들에게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 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전원 찬성)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